

KCC, 법원-현대가 결정에 달렸다!

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 제동걸기 ... 현정은 회장 반격 만만찮아

정상영 금강고려화학(KCC) 명예회장의 압승에 이은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 회장의 반격으로 반전을 거듭해 온 양측의 지분 대결이 KCC의 가처분 신청으로 또다시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다.

현재 법원이 KCC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게 되면 일단 현정은 회장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. 1000만주의 유상증자(자본금의 178%)가 차질없이 추진된다면 청약률 100%, 우리사주 조합원 100% 참여를 기준으로 현정은 회장의 우호지분은 현재 26.11%(김문희 여사 18.93% 포함)에서 약 15.02%로,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의 지분은 31.25%에서 약 11.2%로 변경돼 현정은 회장 지분이 정상영 명예회장을 앞서게 된다.

범 현대가의 우호지분까지 합치면 정상영 명예회장 우호지분은 증자 후 현재 44.4%에서 15.95%로 낮아져 현정은 회장 지분율과 큰 차이가 없게 되며, 기관투자자와 소액주주의 급격한 지분 증가로 큰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.

청약률이 저조하더라도 우리사주 조합원 배정분(최대 가능한도=증자규모의 8.9%)만 충분히 소화된다면 현정은 회장 지분이 계속 정상영 명예회장을 앞지르게 된다.

우리사주 조합원의 유상증자 참여 정도(가능한도액 증자 후 기준으로 5.67%)가 관건이지만 지금까지 현대엘리베이터가 4차례 실시한 증자 때마다 우리사주 조합원 참여율이 모두 100%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사주의 참여율은 한도액을 채울 것으로 현대엘리베이터 측은 기대하고 있다.

또 실제 발행가가 현재 예정가보다 더 떨어지게 되면 우리사주 조합은 12개월 월급 급여만큼 더 많은 지분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현정은 회장의 우호지분 비율은 더 높아지게 된다.

그러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서 KCC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. 일단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의결내용은 효력이 무효화되기 때문에 12월15-16일이 공모예정일인 증자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돼 지분구도 역전을 노렸던 현정은 회장의 재기 시도는 물거품이 될 공산이 크다.

특히, 본안 소송은 통상 소요기간을 감안할 때 2004년 3월로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에 끝나기는 힘들 것으로 보여 대주주인 정상영 명예회장의 현대그룹 무혈점령은 일단 힘을 얻게 된다.

그러나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현정은 회장의 승부수는 끝나지 않을 수 있다.

현정은 회장이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가 신한 BNP파리바투신운용 사모펀드와 뮤추얼펀드를 통해 사들인 지분매입 과정의 위법성을 들어 해당 지분에 대해 처분명령권(금감위)과 의결권 제한(법원)을 신청하게 되면 상황은 또한번 역전될 수 있다. 이에 앞서 금감원은 정상영 명예회장이 사모펀드를 통해 사들인 지분 12.82%에 대해 지분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.

KCC와 계열사인 고려시리카 펀드가 추가로 사들인 7.82%(고려시리카 7.0% 및 KCC 0.82%)를 포함해 총 20.64%가 제재대상이 될 수 있어 정상영 명예회장과 범 현대가의 지분보유율은 곤두박질치며 현정은 회장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.

실제 현정은 회장은 일단은 가처분 신청 기각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하되 만일 KCC의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면 법적대응도 검토한다는 방침 아래 변호사를 선임 등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KCC는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의 지분 매입 조치가 가족회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범 현대가 모두 정상영 명예회장의 뜻에 동조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. 그러나 정작 범 현대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KCC의 주장대로 모두 정상영 명예회장을 지지하는 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.

실제 2003년 8월 외국인 매수세에 맞서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현대엘리베이터 지분 매입과정에는 범 현대가 9개 계열사가 동참했지만 최근 지분 추가매입은 정상영 명예회장과 KCC 단독으로 이루어졌다.

<Chemical Journal 2003/11/21>